

‘IMF 2년의 회고와 한국 경제의 앞날’

-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 -



“97년 말 바닥났던 외환보유고가 IMF 긴급지원자금을 다 갚고도 사상 최대규모인 700억불에 달하고 있고, 지난해 9월 말에는 해외로부터 받을 돈이 더 많은 순채권국으로 전환되었습니다.”

지난달 22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제4회 「정보통신포럼」에 특별강사로 초빙된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강연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우리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IMF 위기상황을 극복했다고 회고하고 이를 새 천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선진경제 진입의 토대를 확고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.

또한 철저한 원인 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개혁만이 제2의 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.

다음은 강봉균 전 장관이 제4회 「정보통신포럼」 행사에서 행한 연설을 요약·정리한 것이다.

되돌아 본 IMF 위기

돌이켜보면, 새 천년의 문턱에서 우리에게 들이닥친 경제위기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안겨주었지만,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외면해온 우리 경제의 환부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.

경제수석과 재경부 장관으로 재임 당시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해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영했다.

우선, 당면한 외환위기의 충격 때문에 극도로 위축된 경제를 정상상태로 복원하는 데 주력하였고, 둘째로 위기의 근본원인이었던 경제 각 부문의 부실을 정리하고 개방적 시장경제질서의 틀을 확립하기 위해 금융·기업·노동·공공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대외개방을 추진하였고, 셋째로 위기수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고통이 컸던 중산·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‘생산적 복지체제’를 구축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 왔다.

이러한 노력의 결과 외환유동성 위기를 완전히 극복한 가운데 빠른 속도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. 그러나 더욱 중요한 성과는 그동안의 과감한 개혁을 통해 지난 30여년간 누적되어 온 우리 경제 구석구석의 비효율과 군더더기가 제거되고 있어 선진국 진입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.

특히 그동안 강도높게 추진해온 금융부문과 기업부문 개혁은 경제개혁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.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재계와 합의한 5대 원칙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재무구조를 견고히 하는 한편,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경영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대폭 정비하였다.

IMF 위기는 과연 끝났는가?

IMF 위기는 상당수준 수습되었다.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추진하는 IMF 위기극복은 '구조개혁'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'경기회복', 그리고 '사회안전망 확충' 등 세 가지 과제가 완수될 때야 비로소 위기극복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.

먼저 구조개혁은 민간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힘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 경기회복은 금년부터 안정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으나 안정화정책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. 마지막으로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불과하며, 앞으로도 부단히 실천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.

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전

전세계는 현재 지식·정보혁명으로 대변되는 21세기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고 국가간 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라는 언제든지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. 인터넷과 정보통신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여 시장을 선점한 기업의 주가는 세계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고 있다. 이러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 직면하여 우리 경제는 디지털과 지식정보혁명이라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.

지식·정보화사회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트워크로 세계 도처에 깔려 있는 귀중한 정보를 자원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인적 자원의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.

또한 1천만이 넘는 인터넷 인구 등은 우리 정보통신산업의 강점이다.

제도약을 위한 우리의 과제

◇시장경제의 기본틀을 다시 세우기 위한 개혁의 완수

시장경제란 각 경제주체들이 '자율'과 '책임'을 동시에 짊어지는 경제체제를 말한다. 선진경제와 우리 경제와의 차이가 이것에 의해 나타나는 만큼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.

◇디지털 경제에의 대비

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인 발달로 인해 세계는 경제활동 방식뿐만 아니라 문화·예술 등에 이르기까지 생활양식이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다.

따라서 지식정보화사회에 맞는 제도적인 장치 마련과 함께 초고속통신망 조기구축, 기술개발 및 표준화 추진, 전문인력의 양성, 네트워크 물류기반 확충 등 인프라 구축에 효과적으로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.

아울러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등장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. 이를 위해 정부는 최소한 모든 국민이 정보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.

